

# “갑질문화 근절·낙하산 인사 배제 대책 세워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

공단 간부의 부하 직원 대상 갑질 사건 ‘도마위’ 해당 간부, ‘정직 3개월’로 가장 가벼운 처분 받아 김태현 이사장 “정직 3개월 외 앞으로 인사에 반영” “공단이 이런 괴물을 키웠어” 등 내부 의견도 공개돼 상임감사 임명 관련 현 정부 낙하산 인사 의혹도 제기

국민연금공단이 2019년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5년 여의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공단 간부(1급)직원의 심각한 갑질 문제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서미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매서운 질의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서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 A 간부(1급)직원의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사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서 간부 직원이 “쌍X아, 미친X아”라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심한 갑질 사건에 대하여 징계 처분은 ‘정직 3개월’에 그치고 이를 ‘엄중 처벌’이라고 밝혀 국민의 반목을 샀다. 공단의 중징계는 파면, 해임 징계의 3단계이며, 그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 정직이다.

서 의원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이 정도의 갑질 사건은 파면감”이라며, “정직 3월은 휴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며, “직장 내 괴물들은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정직 3개월 외에도 앞으로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에 발생한 공단 내 간부 갑질 사건에 대한 내부 의견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는데, 공단 감사실을 질타하며 “공단의 압도적 감사실”, “공단이 이런 괴물을 키웠어”, “신고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난다” 등의 강도 높은 비판 글이 쏟아져 나오는 등 감사실에 대한 공단 내 직원들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드러냈다.

이어 “지원자 중에는 변호사, 회계사 등 사계의 전문가들이 다수 지원했음에도 유아교육 전문기인 류 상임감사가 선정된 것이 공정한 선정이냐”고 밝혀 주목받았다.

한편, 도민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이곳 전후 혁신도시에 위치해 도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며,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이처럼 공단 간부의 갑질 사건이나 일으키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공단은 신속히 간부 직원에 대해 갑질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며, “상임감사가 전문성이 떨어진 낙하산 인사나 내리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5천만 국민들의 노후를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며, 격정 어린 시선과 함께 “앞으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101년간 일본으로부터 부정당한 진실 밝힌다

민주 김윤덕 의원 등 공동주최 간토대학살 영화 르포컷 전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같은 당 소속 김윤덕·윤건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101년간 부정당한 진실, 1923 간토대학살 영화 르포컷’ 전시회가 오는 23~25일 국회의원회관 3층 제3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101년간 일본으로부터 부정당한 간토대학살의 역사를 증거와 증언을 통해 바로잡고, 국민 모두가 기억해야 할 역사를 되새기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세부 전시 내용은 다큐멘터리 ‘1923 간토대학살’에서 나온 관련 역사 자료들과 주요 내용 등을 전시할 예정이며, 관련 학자와 정치인들이 함께 참여해 간토대학살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메인 행사는 23일 오전 11시 15분에 시작되며, 이종찬 광복회 회장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환영사를 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 윤건영 의원이 대회사와 한국독립영화협회 백재호 이사장이 사회를 맡아 역사적 의미를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권재익 유가족을 비롯해 김태영 다큐멘터리 감독, 시민모임 독립이만열 이사장 등이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서 역사바로잡기연구소 황현필 소장이 간토대학살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며, 김태영 감독과 최규석 감독이 사진전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안전관리 조례, 도의회 통과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 등 교육기관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가 22일 제4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만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만열 의원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등 설치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등 인명피해 최소화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육감에게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 마감 재제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하고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기 의원은 “화재 사고에 취약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는 보다 세심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김건희 모녀 동행명령장 집행 동행

민주 이성운 의원 “진실 확인 위해 증언대로 불러 서울 것”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김건희·최은순 모녀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했다.



이성운 의원은 “최근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했음에도 국가기관 어디 하나 제대로 따져 묻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증감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으로 국민에게서 알고자 하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 증언대로 불러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인력 미배치

전국 경찰서 259곳 중 92곳... 인력 부족이 원인

전국 259개 경찰서 중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에게 배치하지 못했다. 올해 9월 기준, 관리 인력 미배치 관서 중 등록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전북 완주경찰서(대상자 221명)였고, 충북 진천경찰서(220명), 경남 사천경찰서(219명), 서울 방배경찰서(216명), 대구 중부경찰서(205명)에도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

시·도청별로는 전남청이 22개 경찰서 중 17곳에, 경북청이 23개 관서 중 16곳에 관리 인력이 없었다. 강원청(13곳)과 경남청(12곳), 전북청(10곳)에서도 미배치 관서가 많았고, 서울청도 종로와 남대문, 혜화, 방배경찰서 등 네 곳에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 /이만호 기자

## 해상 음주운항 2건 중 1건 ‘면허취소’ 수준

적발자 499명 중 절반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넘어

최근 5년간 ‘해상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사람이 약 500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 중 절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은 총 499명이다. 2021년 82명, 2022년 73명을 기록하다가 2023년에는 소폭 증가해 90명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해당하는 사람은 235명이며, 0.08% 이상인 자는 0.2% 이상 45명을 포함해 총 238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특히 499명 중 36명은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자로 확인됐다.

한편 같은 기간 음주운항 사고는 총 78건 발생했는데, 충돌사고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좌초가 11건, 전복이 6건 등을 차지했다. 음주운항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0명이며 이 중 8건의 피해가 남해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음·김대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21일부터 1박 2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역량 강화와 소통을 위한 연찬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사무처 직원 연찬회 개최

명사초청 특강... 도의원 리더십·역량 강화 도도 도의원-사무처 직원 간 현안 공유, 화합 계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21일부터 1박 2일간 군산 일원에서 역량 강화와 소통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한성덕 경상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나서 바람직한 가치관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우리 국민은 이진보다 더 정직하고 청렴한 리더를 원하고 있고, 바람직한 가치관에서 출발한 감동적인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학과 주역 등 동양 고전을

통해 실천과 정성, 협치와 솔선수범의 자세 등을 주문했다.

또한, 스미일 연구소 고이라 대표는 ‘나부터 행복해지는 웃음 다이어리’라는 주제로 “할나의 순간을 웃을 수 있다면 또 그 힘으로 살아갈 힘이 생긴다.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며, 웃음과 긍정적 자세를 강조했다.

문승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찬회가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

과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주요 현안을 이해하고, 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소통하며 재충전의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의회가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승봉 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연찬회는 의원과 직원들이 소통하며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라며, “이후에도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尹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 정책 기조 무색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사례 지속... 1명이 5648개 처방받기도 정부, 내년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예산 대폭 삭감 민주 박희승 의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할 필요 있어” 강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책 기조가 무색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러 지표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사례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내년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 구축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환자 1인당 연간 의료용 마약류 평균 처방량은 55.9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1년에 환자 1인당 5647.5개(정), 하루 평균 15개 이상을 처방받은 사례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 동안 환

자 1인당 2,490개를 처방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9년 대구 달서구 의료기관은 총 2,334만개, 환자 1인당 657개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도 했다.

그런데 식약처는 내년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K-NASS)’ 구축 예산(안)을 총 42.78억원 요청하였으나, 정부 심의 과정에서 7.9억만 반영되어 81.5%가 삭감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AI 기반 빅데이터 수집·분석 자동화로 사전 오남용을 예측하여 마약류 처방 환자가 증폭에 이르지 않도록 환자, 의사, 관계 기관에 정보를 공유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3개년 사업,

총133억)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예산 삭감으로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일부만 구축(25%만 정보 연계 가능)이 가능해 ‘지능형 마약류 오남용 예측 고도화 사업’ 확대 추진이 어렵게 됐다.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후 마약 관련 예산을 증액시켰다.

박희승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2년도 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예산을 대폭 삭감시킨 것은 스스로 정책 기조를 뒤엎은 조치다.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지 못하도록 실시한 환자 1인당 15개 이상을 처방받은 사례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 동안 환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